

홈 > 뉴스 > 뉴스 > 대학교육

장애인 대학생 증가하고 있지만…"일할 곳이 없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2.5%대, 의무기준 2.7%에도 미달

2017년 09월 18일 10:29:32

이지희 기자 ✉ easy@unn.net

취업 실패한 장애 학생들 대학 전전…“교육쇼핑만 늘어나”
전문가들 “장애인 인턴십·중증장애 대상 고용 쿼터제 등 필요”



▲ 200여명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대구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대구대 장애학생 지원센터)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장애인 고용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장애인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마치고 졸업해도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진학률만 높아지고, ‘교육쇼핑’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 장애인 대학생 수 해마다 늘어 4600여명 달해…고용률은 수년째 2%대 수준 = 장애인 대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당시 8개 대학에 113명의 장애인이 입학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대학에 460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서울소재 주요 대학에도 △고려대(122명) △명지대(114명·캠퍼스) △경희대(94명) △연세대(71명) △삼육대(68명) 순으로 상당수의 장애인 학생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각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장애인 대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016년 정부 부문에서 2.81%, 민간 부문에서는 2.56%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해 정부 부문은 0.41p%, 민간 부문은 0.35p% 늘어났을 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민간부문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2.9%, 2019년까지 3.1%로 장애인 고용률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전지혜 인천대 교수(사회복지)는 “아무래도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장애인 고용 시 수반되는 물리적·금전적 지원은 체계가 다 마련돼 있지만 이를 모르는 기업도 많고, 알면서도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려대 장애인권위원장 최현호씨는 “기업이나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며 “기업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가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장애 학생을 고용하기보다 차라리 벌금을 내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장애학생도 일반 기업에 취업이 어려우니 교사나 공무원을 준비하자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장애 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대학원 입학은 반복한다. A대 장애인지원센터 담당자는 “기업들이 장애인 학생을 추천해달라고 하지만 막상 면접에 가면 중증장애인이란 이유로 거의 채용이 안된다”며 “장애 학생들도 취업을 해서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취업이 안 되니 대학원 진학이나 다른 전공 공부를 또 하려고 하는 ‘교육쇼핑’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학들 장애인 취업 지원 미비도 문제 = 장애 학생들에게 취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수십 명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서울 소재 B대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 취업 프로그램은 없다”며 “기업에서 장애인 채용 공고가 오면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정도”라고 밝혔다. C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특별히 장애 학생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는 없으며 학생들이 원하면 학교에 있는 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뿐이었다.

일부 대학은 전문적인 장애 학생 맞춤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209명의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대구대는 취업 박람회와 맞춤 취업 진로 상담부터 해외연수 프로그램까지 마련하고 있다. 나사렛대에는 350명의 장애인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대학은 장애인 전담 인력이 취업 실무과정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해 취업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학도 장애 학생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대구대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는 “대구대는 전체 장애 학생 중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이 50%를 넘기 때문에 이 학생을 중심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취업이 어렵다”며 “경증장애 학생에 비하면 중증장애 학생 취업률은 50%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유는 역시 기업이 중증장애 학생의 고용을 꺼리는 데다 고용을 확대할만한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 90%에 달하는 중증장애 대학생들이 재학 중인 나사렛대에서는 전담 담당자들이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나사렛대 장애인 취업 캠프. (사진= 나사렛대 장애학생지원센터)

나사렛대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도 “나사렛대는 중증장애 학생들이 90%에 달하지만 기업이 경증장애 학생을 더 선호해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또 정부에서는 생활 편의를 위한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취업 지원은 거의 학교가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에게 정부 차원의 취업 지원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 기업과 사회 전체 인식전환 필요…취업 확대 위한 제도가 필수 = 전지혜 인천대 교수는 중증장애인 인턴십 제도나 호주의 임금보조제도 방식을 도입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전 교수는 “한국장애고용공단에서 기업에 장애인을 위한 기반 시설과 지원이 다 돼 있지만 장애인과의 업무 경험이 없는 기업에서는 일종의 선입견을 갖고 장애인과 일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인턴십을 통해 장애 학생과 기업 모두 서로에 대해 경험해 보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화 삼육대 교수(사회복지)도 일단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의 복지기관도 장애인을 잘 채용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 학생의 노동 능력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기업이 장애 학생 고용을 촉진하도록 기업 뿐 아니라 공공일자리에서도 취업 쿼터를 포함하는 방안이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중증장애인 취업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행정·복지국가연구센터장)는 “장애인도 사회 기여를 하면서 자립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의 장애 정도나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 임금과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해 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